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 개혁 투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2, 3, 16면

세계적 건축 논쟁의 배경
더블딤에 대한 불안감

▶ 15면

천안함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중미 관계는 어디로?

▶ 6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경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6-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9

Left21.com

2010년 7월 17일 ~ 7월 30일 | 제36호 | 값 1,800원

리포트21

이명박 정부: 부패, 불의, 분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의 아귀 다툼이 “저수지 독에 쥐구멍이 뚫리는 심상치 않은 상황”(민주당 박지원)에 이르고 있다.

이제 겨우 임기의 절반을 채워 가는 정부가 왜 벌써부터 난파선 같은 상태가 된 것일까? 우선 그 계기는 지방선거 참패였다. 그 후부터 세종시 수정안 부결, 경찰 내부 항명 사태 등이 이어지다가 이제 ‘영포 게이트’가 터져 나온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것은 이명박 밑에서 권력과 부를 차지하려고 줄서기를 하던 자들의 대열을 뒤흔들었다. 이 줄을 타고 권력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열어진 것이다. 이명박의 통제력은 급속도로 이완됐고,

이명박 밑에 줄서던 자들은 이제 ‘너 죽고 나 살기’ 권력 다툼에 돌입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때까지만 해도, 친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친이 쪽에는 이명박의 입김이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두나라당’이 ‘세나라당’으로 발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포게이트를 통해 친이마저 분열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면 위

사실 ‘이명박 정권 창출의 3대 주축’이라는 이상득계, 정두언계, 이재오계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다. 이 갈등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예컨대, 촛불항쟁 때 정두언은 “음해, 모략의 명수”라며 박영준을 공격했다. 이상득의 최측근이며 ‘왕비서관’이라 불

리던 박영준은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나야 했다.

노무현 사망 정국 때도 표적이 됐던 이상득이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며 정두언, 박형준 등이 전진 배치됐다.

그러나 정두언이 진두지휘한 지방선거가 참패로 끝나면서, 이번 청와대와 내각 개편은 박영준이 주도하게 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 상황에서 박영준 쪽을 견제하려는 정두언 쪽의 폭로전이 시작됐다. 박지원도 “박영준 국무차장이 청와대 개편안을 작성, 청와대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여권 일각에서] 이를 막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들 사이에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박영준 쪽은 강부자 내각 구성과 친기업 정책의 주동자이고 정두언 쪽은 천안함 북풍몰이와 전교

조 마녀사냥의 주역이다. 역겹고 위선적인 우파들이 서로 권력 지분을 더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은 이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지금까지 이 충성 경쟁은 통제 선 안에서 벌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배자들의 분열은 더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의 권력 다툼이 통제 선을 벗어나고 있다.

심지어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민주당과 손을 잡는 양상까지 나타난다. 박지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우리한테 박영준을 막아 달라는 제보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패와 비리 등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친이끼리의 갈등이 이 정도라면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전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현재 박근혜는 깊어 가는 이명박의 위기를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하고 차기 권력을 둘러싼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폭로전과 정면 대결로 치달게 되면,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박근혜는 이미 지난 대선 경선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패 의혹의] 시한폭탄”이라고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바 있다.

이처럼 지배자들의 정치 위기와 분열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은 우리 편에게 저항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더욱 확대하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며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앞당겨야 한다.

전지윤

▶ 관련 기사 3면

로켓 공격받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

진짜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철수하라

6월 30일(현지 시간) 저녁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에 있는 한국군 ‘오쉬노’ 부대 기지 건설 현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저항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사정거리 7백 미터를 넘지 않는 로켓 추진형 수류탄(RPG) 두 발이 건설 현장을 향해 발사됐다.

이날은 ‘오쉬노’ 부대가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날이었다. 또한 파르완주 지역 재건사업의 권한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는 날이었다.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재파병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저항 세력이 “환영 인사”(카불 국제안보지원군 본부 캐빈 벨 중사)를 한 것이다.

한국군이 무장저항 세력의 표적이 됐는데도 정부는 ‘진상 조사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표적

파르완주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자 최상의 파병 지역이라던 외통부장관 유명환도, 탈레반의 위협 때문에 파병을 안할 수는 없다면 한나라당도 침묵하고 있다.

왜 ‘오쉬노’ 부대가 무장저항 세력의 표적이 됐는가? 캐빈 벨 중사는 <시사IN>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탈레반은 한국군

이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다가 인질 사건과 함께 철군한 일”뿐 아니라 재파병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또, 바그람 미군 기지가 있어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그는 “파르완주 안에 바그람 기지가 있기 때문에 탈레반의 공격 목표가 된다. 바그람 주변에서 전투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오쉬노’ 부대장 이정기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파르완주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절대 안전 지역은 아니다.

“지난번 바그람 기지에 대한 복합적 공격[5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 진입을 시도하면서 7시간 동안 벌인 치열한 교전을 말한다]이 말해주듯 이곳 또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사실, 전쟁터에서 안전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지옥에서 안전 정도를 논하는 꼴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7월 초에는 외국군뿐 아니라 민간 재건 사업을 벌이던 국제 NGO 활동가가 살해됐다. 이미 이 전쟁은 군복의 색깔도, 군인이냐 민간인이냐도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 전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



태는 세력은 누구든 무장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베트남 전

쟁 기간을 갱신하며 미군이 벌인 전쟁 중 가장 긴 전쟁이 됐다.

9년째 접어든 이 전쟁을 도대체 왜 아

직도 지속하는가. 점령군은 재건·민주주의·인권·평화·정의를 내세우지만 어느 것 하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G20 의장국이니 이 전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파병이 재건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파병 비용 1천억 원 중 단 10퍼센트만이 재건 사업에 쓰인다.

이명박은 지난해 라디오 연설(29차)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우리의 상품을 팔아 살아가는 나라다. 우리가 국제적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국가 브랜드도 더욱 올라간다고 믿는다”고 파병 이유를 솔직하게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를 올리려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학살해야 하는가.

지난해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테러 표적이 된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파병은 군인들뿐 아니라 파병 국가의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패권 전쟁에 파병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에 반대해 이 전쟁을 중단시키기를 염원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오쉬노’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김덕택 반전쟁화연대(준) 공동간사

▶ 관련 기사 5, 12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의 길 위에 서 있는
점령군

▶ 5면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보험료 인상이냐
부자 증세냐

▶ 10면



그리스
그리스 파업에
‘여름 휴가’는 없다

▶ 6면

이슬람 혐오증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겨운 논리

▶ 12면

세상을 읽는 법

“자식 3명이 있는데 아버지 직업
란에 국회의원으로 쓰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아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의 자녀들

“이곳 저곳 절을 옮겨다니며 고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당시 우리
고향집에는 ... 노모가 글을 모른
다. 영장이 왔는데, 영장인지 아
닌지 몰라서 연결이 안 됐다”
안상수의 병역면제 변명

“여러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
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정두언이 이명박의 경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정두언 의원의 눈물 연기. 정치,
가수에 이어... 역시 만능 엔터테
이너!”
트위터에 올라 온 글

“어제도 식사를 하고서 카드가 정
지돼서 계산을 할 수 없었다”
전교조 명단 공개 후
갈수록 공상을 떠는 조전혁

“조전혁 의원께서 후원받은 돼지
저금통을 개인채무변제에 쓰시고
증거도 제시하셨군요. 정치자금법
23조3항2호, 47조 위반, 2년 이하 징
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인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발음이나 억양의 부정확성으로
내용 전달의 객관성과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침으로써 방송법과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
KBS가 김미화를 교체한 이유,
그러면 이명박은?

“우리 언론의 [월드컵] 기사 제목
들은 또 어쩔 그렇게 한결같은가.
결핍하면 '세계가 놀랐다' 하고 뻔
하면 '세계가 충격'받고 '세계가
경악'했다단. 이쯤 되면 '세계'는
한국 때문에 피곤해서 살 수가 없
을 지경이다”
동아대 교수 정희준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진보연대·참여연
대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미국의 군사 전략, 저작권 그리고 한미동
맹', '캐나다 G20 반대 시위 참가기', '왜
언론은 천리안보다 나로호 발사에 열광했
나?'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가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7월 23일(금) 거리판매는 잠시중2010
행사 관례로 쉽니다.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
(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
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치를 위해서라며 외
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
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
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
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
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
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하듯 끌고 가다가 다시
풀어준 일이 있었다. 단속반 직
원이 이 노동자에게 한 말은 사
과는커녕 “앞으로 조심해”였다.
급기야 수원에서는 단속돼 잡혀
온 중국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
리소 내에서 직원이 보란듯이 폭
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단속
과정에서 저항한 것에 대한 보복
이었다.

단속 실적 경쟁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동자
들을 내쫓기에 바빠 이주노동자
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등 고충
처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심
지어 지난 6월 초 인천 출입국은
단속된 필리핀 노동자가 벌금 납
부를 거부하자 본인 동의도 없이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5월 2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2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을 벌금으
로 가로채 갔다. 그나마 그럴 돈
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벌금을
내지 못해 그 열악한 외국인 수
용소에 장기 구금되고 있다.

법무부의 야만적 공격은 이계
다가 아니다. 집중 단속이 시작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결혼 이주
민들은 주변의 미등록 이주노동
자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고 한다. 심지어 미등록 이주자
를 신고한 이주자의 통장으로 돈

이 입금됐다는 제보도 있다.

한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출입
국별 단속 할당을 부과했던 정부
가 이제는 단속반 직원 개개인들
의 단속 실적을 경쟁시키고 있다
고 한다.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단속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단속이 벌어지는 것은 이같
은 정부의 실적 경쟁이 부추긴
결과다.

수 년간 지속해 온 단속 정책
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

부는 내국인들에게 이주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이주자들
내에서도 분열을 유도하는 정책
을 펴고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미등
록 이주자들을 그들이 속한 공동
체에서 고립시켜 결국 버티지 못
하고 떠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아
무리 박해를 해도 모든 이주자들

내쫓을 수는 없고 미등록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한쪽에서 이주
노동자가 쫓겨나면 또 다른 쪽에
서 새롭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긴다. 이 정부가 더욱 강화한
이주규제들이 한편에서 미등록
체류자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

오늘까지 적법한 체류자였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불법’ 신
세가 되는 ‘역전’은 수도 없이 일
어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그
반대의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
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전반적인 사회 통제를 위
해 가장 만만한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
만 최근 대통령 이명박의 최측근
들이 벌인 온갖 추악하고 부패한
짓을 보노라면, 이들은 법과 사
회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
들이다.

정부의 G20 찬양 주장을 듣다
보면,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데나 기여하
는 20개 국 정상들에게는 활짝
열린 국경이 정말 절박한 사람들
에게는 이토록 철저히 닫혀 있는
것만큼 역설적인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형 구형

검찰이 철거민 단죄 자격 있는가

7월 5일 검찰은 불구속 상태
로 재판을 받던 용산참사 망루
농성 철거민 14명에게 3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월 12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
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
한 투쟁 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
철연으로 철거민들이 모이게 한



다”며 이런 무자비한 구형을 정
당화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
보로 위험한’ 살인 진압을 자행
한 것은 바로 정부와 경찰이다.
이런 탄압과 인정사정없는 재개
발 정책이 철거민들로 하여금 단
결하고 저항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다시금 용산참사의 책
임이 무고한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정당했다
며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
박 정부와 지배자들의 입장을 대
변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7월 12일 성
명을 통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철거민들이 연대하여, 투쟁
의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검찰
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공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조
폭’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마녀사냥”이라
고 규탄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
며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철
거민들을 살인 진압하도록 교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이고, 살인 진압
으로 5명을 죽인 것도 경찰이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와 증거
를 은폐해 준 것이 검찰이고, 사
법부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
에 면죄부를 줬었다. 용산참사의
‘공범’들이란 것이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용산 철거
민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이재환

현직 교사가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내는 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
다.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정
지된다고 한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
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에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유보
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마땅한 직
무수행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세상
은 살 만하고, 노력만 한다면 인
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수월성 교육과 학교 자
율화 조처 이후 이 말은 거짓말
이 됐다. 비강남에 살며 잘나가
는 부모, 돈 많은 부모를 두지 못
했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과 다양
한 교육도 우리 아이들과는 상관
이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학생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교과부야말로 유죄다.

희망은 이미 물 건너 갔기에 교
사는 희망을 말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학생
들은 교사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제고사는 학생을 시험 보는
기계로, 교사는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기계로 전락시켰다.

2009년 6월 10일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배운 대로 행
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것이 청소년들의 외침이었다. 정
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우리가 가르쳤다. 민주
주의를 가르쳤고, 불의에 저항하
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
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
자고 가르쳤다.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난한 부모를 죽이고,
꿈 많고 초롱한 눈빛을 지닌 아
이들을 시험의 노예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사회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
이들에게 희망을 말하기 위해,
교육은 어디 있느냐고 질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조선시대에도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끼칠 악영향
이 있을 때 상소문이 속출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야말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당해야 한
다.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
음을 알리고 이를 재고할 것을
알려 주었음에도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김상곤 교육감에게도 아
쉬움이 있다. 진보정당에 후원금
을 내고, 일제교사에 반대한 교
사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겠
다고 한 것은 매우 아쉽다. 이것
은 진보적 교육감을 선택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

이번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런 결과
는 진보 교육감 1호였던 김상곤
교육감에게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희
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진보적 행보가
흔들릴 때마다 하워드 진의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달리는 기차
위에 종립은 없다.”

박혜성

진보교육감과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한 이후 교육 혁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다. 그런데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자마자 보인 행보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7월 13~14일 교과부가 주관하는 일제고사 시행을 앞두고 보인 우경적 행보는 진보진영에서 두 교육감의 정체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고,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이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단 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에게 투표한 수많은 교사·학부모들의 무한 경쟁 교육 반대 열망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상스런 대응이다.

박노현 교육감의 태도는 김상곤 교육감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 역시 우려스러웠다. 비록 박 교육감이 일제고사 전 날 대체학습을 허용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내긴 했지만, 애초에 선택권 보장이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미적거림은 실망과 우려(심지어 분노까지)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박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과부가 주관하는 일제고사 수용 의사를 비치면서 선택권 문제에 침묵을 지키다 12일 오전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개적 비판이 있고 서야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막판이라도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제고사 전 날 오후에야 공문을 내려 학교가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를 알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서울시 교육청은 다음날 “대체 프로그램 지침을 시험 선택권 부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해 또 한차례 동요를 드러냈다.)

박노현의 당선으로 일제고사 반대 투쟁 활성화에 내심 큰 기대를 건 전교조 교사들과 진보적 학부모들에게 박 교육감은 당혹감을 안겨주었고 운동 건설에 혼란을 초래했다. 일제고사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 말이다.

박 교육감의 행보에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해직교사 복직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선거 때 약속과 달리, 2008년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7명이 하루빨리 복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파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다.

이들 해직 교사들은 지난해 말 서울시



“진보교육감은 누가 왜 뽑아주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일제고사가 실시된 7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마당에서는 ‘일제고사·교원평가 경쟁 교육 폐지! 협력교육 실현!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당선 직후 해당 감사장에게 항소 취하를 신청했는데, 박 교육감은 전교조 서울지부 등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항소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 탄압

김상곤·박노현 두 교육감의 유약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한 거센 공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두 교육감은 전교조와 거리 두기(김상곤 교육감이 더 노골적이었다)를 해 전투적 교사들과 좌파들의 반발을 샀다.

두 교육감이 보이는 우경적 행보의 근저에는 국가 탄압이라는 실질적 위협이 있다.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교과부가 징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교과부 지침을 거슬러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하면 최악의 경우 직무 정지까지 감수해야 한다.

국가 기구(예컨대, 사법부)를 이용한 우파의 공격은 실질적 위협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국가 탄압 때문에 김상곤·박노현 교육감의 우경화 또는 갈팡질팡 행보를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후퇴로 용인하는 정서가 진보진영 내에 상당하다.

물론 진보진영은 국가와 우파 언론 등의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에 맞서 김 교육감을 분명하게 방어해야 한다. 하지만 이방어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무비판적

방어가 아니라 비판적 방어가 돼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과 박노현 교육감)에 대한 무비판적 추수는 사람들의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 탄압에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파면·해임 등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도 운동의 대의를 지키고자 끝까지 투쟁해 온 많은 전교조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 기회주의적 대처가 마치 탄압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책인 양 대중을 호도할 수 있다.

진보적 인사가 취임 뒤 우파 눈치를 보며 온건해지는 것은 국가 탄압을 막기는 커녕 도리어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파의 힘만 키워준다.

개혁의 동력

국가 탄압의 위협뿐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려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주당에 의존하는 게 두 교육감들의 온건화를 부추기는 듯하다. 민주당연합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진영 상당수가 이런 두 교육감을 추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변화 열망을 정권 재탈환의 불쏘시개로만 활용하려는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없다.

국가 탄압과 보수적 교육 관료들의 저항, 우파들의 반발을 뚫고 의미 있는 개혁들을 이루려면 진보교육감 탄생의 원동력인 진보적 대중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울바르게도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그런 구실을 하고

있다.

두 교육감은 교과부의 공공연한 협박 속에서도 일제고사 강행을 비판하며 체험학습 허용이나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 등 응시 선택권을 보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는 교육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중투쟁이 개혁의 동력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주아 여론과 명망을 중시하면 우파의 위협 앞에 쉽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김상곤·박노현 교육감이 투쟁에 찬물을 끼얹거나 투쟁을 고무

할 수 있는 언행을 극도로 삼가면서 언제든 후퇴할 조짐을 보이는 까닭이다.

서울과 경기 같은 핵심 지역 교육감들의 동요는 우파의 공세를 강화하고 진보진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혼란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려면 진보진영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이 올바른 태도를 취할 때는 지지하고, 불필요하거나 배신적 타협을 할 때는 주저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개적 비판은 박노현 교육감의 우경적 행보에 제동을 거는 데 크게 일조했다.

앞으로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들이 지그재그 행보를 반복하고 그 결과 우파의 공세가 강화될지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레임덕을 겪고 있고 우파들은 분열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할 수 있다.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들이 급진적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개혁을 위한 추진력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회를 바꾸는 힘은 결국 대중운동의 힘에 달려 있다. 보수파들의 반발을 뚫고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대중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다.

좌파는 지금과는 다른 학교, 다른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열망에 부응해 개혁주의자들과 공동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교육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선명한 좌파적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정진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영포회

이명박 ‘공안’ 통치의 별동대

청와대는 ‘영포 게이트’가 터져 나오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 그러나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은 헛웃음만 나오게 한다.

이명박은 이미 대선 때부터 도곡동 땅, BBK, AIG 특혜, DMC 특혜 등 온갖 비리 의혹에 시달렸다. 취임 후에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부인의 사촌언니가 수십억 원을 받고 공천 장사를 한 ‘언니 게이트’가 있었고, 이명박 사돈이 연루된 ‘효

성 게이트’도 있었다.

전 청와대 비서관 추부길은 박연차에게 돈을 받아 구속됐고, ‘왕의 친구’ 천신일과 ‘만사형통’ 이상득을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영포 게이트를 통해 ‘만사형통’(형을 통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의혹의 핵심에는 11년 동안 이상득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준이 있다.

박영준은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직자·기업주들의 모임)와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이 정부의 노른자위를 차지

하도록 다리를 놓았다. 영포회는 이명박과 이상득이 고문을 맡았던 모임이고 선진국민연대는 이명박의 친위 조직이다.

지금 문제가 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정인철은 모두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를 통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정권 보위 별동대’처럼 활개쳐 왔다.

청와대 경내에서 다른 비서관에게 “이 XX … 가만 안 두겠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멀쩡했다는 이영호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조폭을 연상케 한다. 예컨대, 정인철은 기업주들에게 “잘 아는 형님인데 찾아가면 도와주시라”고 부탁했고, 그 ‘형님’은 “내가 누군지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녔다.

이들은 검찰·경찰·국정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전달받고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이용해 활동했다고 한다.

이런 힘을 이용해 광범한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포스코·KB 금융지주 등 주요 공기업과 은행장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패에 연루

된 듯하다.

특히 한국노총 관료 출신인 이영호가 금융권 임금 삭감과 노조법 개악 과정에서 한 행태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한나라당 정책 연대의 추악한 실체를 잘 보여 준다.

영포 게이트는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만사형통의 힘을 믿고 권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이에 대한 분노로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이명박은 이상득의 정치적 양자라는 임태희를 대통령실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만사형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전지윤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의 반동 엔진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집권당 내부 분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재오가 당의 도움 없이 혼자 선거를 치르겠다며 선을 긋겠는가.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도 패배한다면 이명박의 레임덕과 여권 분열은 더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6·2 지방선거 때처럼 범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의 오른팔이던 이재오에 맞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이 모두 후보를 낸 서울 은평 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 8곳에서 모두 사실상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서울 은평구 시민단체·촛불모임 등 주민 수백 명이 서명해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의 단일화를 공개 촉구했다.

오른팔

“[이재오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으니] … 대의를 생각해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물론, 이들 다수는 “동의할 수 없는 후보”를 낸 민주당에 불만을 털어냈다.

이런 불만에는 민주당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도 깔려 있다.

광주 남구에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야 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을 모아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비민주당] 시민사회 단일 후보”로 내세웠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사실상 집권당 노릇을 하며 문제를 일으켜 온 민주당에게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이명박 정서 속에서도 존재하는 민주당 불신 정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복지를 말하지만 부자 증세를 말하지 않고, 4대강 반대를 말하지만 4대강에 찬성한 후보를 공천하며, 반MB를 말하지만 일관되게 이명박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런 모순은 기업주들의 당이라는 근본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고쳐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 집권당의 패인을 묻는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 야



7월 13일 금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진보 인사.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선 민주노동당이 먼저 반MB 야권 단일화 미련을 버려야 한다.

당이 잘해서’라는 사람은 2.4퍼센트에 불과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번 재보선을 진보 단일화와 독자 완주를 통해 독자적 진보 대안을 건설할 기회로 삼는 게 현명하다.

진보 후보들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이명박 정부와 기성 정당들에 진정한 압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반MB 야권 단일화로 민주당을 당선시켰다가 그들이 이명박 정부와 타협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민주당의 10년 집권 경험이란 바로 이것 아닌가.

진보 후보가 진보적 주장을 날카롭게 펴고 의미 있는 득표를 했을 때, 누가 당선하든지 진보의 만만치 않은 힘을 의식해 함부로 공격이나 배신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반MB 민주연합 때문에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의존한 결과, 진보진영은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개 정책에 맞서 일관된 투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반년간 민주당을 추수하며 독립적 투쟁을 미루다 통과를 막지 못한 타임오프제가 대표 사례다.

압력

그래서 설사 당선 못 하더라도 진보 후보의 의미 있는 득표가 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독립적 진보 정치대안 건설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을수록 이런 미래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당 금민 후보의 진보 단일화 논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이상규 후보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마침 진보신당도 은평에서 진보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며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두 진보 후보 사이에 커다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맞다.

두 후보는 정부 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등 진보적 정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의 고통전개에 반대하는 진보적 가치와 운동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범야권 단일

화 미련을 버리고 은평에선 진보 후보 단일화에 나서고, 유일한 진보 후보가 된 나머지 세 곳에서는 독립적 진보 대안 건설을 위해 완주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유감스럽게도 “어떤 살신성인 다해서라도 야권 연대 만들어 내야한다”며 또다시 반MB 야권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다.

반MB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살신성인”까지 하겠다면서 동시에 “이제는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매달리는 것은 구차하게 보이기도 한다. 정책과 정치 노선을 우선해야 하는 진보정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이 같은 ‘민주당 양보론’을 두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시장에서 … 흥정하는 것처럼 비취”진다고 비판했다.

행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또다시 민주당과 단일화를 추진하려 하면 진보진영 전체로부터 혼쾌한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고 진보대통합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수도권에서 진보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과제도 더욱 멀어질 것이다.

사회당도 “민주노동당의 [6·2 지방선거 방침에 관한] 책임 있는 평가와 성찰”을 후보 단일화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거나 자당 중심의 단일화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협력적 논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다.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 교수는 “[PD] 좌파가 계속 [국민승리21(민주노동당의 전신)에] 남아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

주노동당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으로 지난 시기를 평가한다.

자주파와 공동행동에 거리를 뒀 왔고, 민주노동당 분당 때는 “범좌파세력당”을 제안했던 김세균 교수의 이런 변화는 반MB 정서를 수용하면서도 진보의 독자성과 폭넓은 단결 원인을 모두 대변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긍정적이다.

다만, 김 교수가 진보대통합의 범위를 민주노동당보다 ‘왼쪽 세력’(김 교수의 분류법에 따르면,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쉽다. 이 구상대로면 ‘진보대연합’의 또 다른 과

제인, 민주당의 왼쪽파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에 포진한 진보 성향 대중을 진보정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에는 약점이 생길 수 있다.

국민참여당 등 민주당의 아류는 배제돼야 하지만 진보적 NGO와 개인 들은 진보연합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김 교수 등이 주도한 진보적 지식인과 노동자들의 금민 후보 지지 선언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증명하기 위해 서라도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옳”다는 요구도 협력과 신뢰가 중요한 진보연합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 아쉽다.

김문성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관광성 외유 의혹

최근 인천시가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 지원’ 명목으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출연한 돈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9명이 무더기 외유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 중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번 무더기 외유가 OCA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경비는 사실상 인천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번 외유는 “스포츠 약소국 지원과 무관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방문 일정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처벌 대동했다. 그래서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외유를 주도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OCA 부위원장 겸직) 신용석은 아시안게임유치위원장을 지내던 2006년 유치위원회 서울사무소를 자신이 대표이사인 여행사에 뒤 1년

이상 거액 임대료를 유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기성정당 국회의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낭비성·관광성 외유를 다니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었다. 2010년 1월 경실련 발표를 보면, “18대 국회 방문외교 절반”이 “외유성”이었다.

따라서 권영길 의원이 민주노동당 당원과 시민단체의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

인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진보정당 의원이 기성 주류 정당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하려 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더구나 KBS 노동자 파업, 일제고사 강행, 전교조·공무원 노동자 탄압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권영길 의원의 이런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낭비성·관광성 외유

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경비 반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4년 원내 진출 후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의원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온갖 불필요한 특권, 불평등한 특권을 폐지하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하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의원은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유병규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점령군

영국군이 헬만드 주의 상진에서 철군하겠다는 굴욕적인 선언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나토 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지고 있다. 주디스 오어가 그 이유를 살펴봤다. 주디스 오어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중앙간사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영국군이 위기에 빠졌다. 군 지휘관들은 헬만드 주 상진에서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다.

상진은 영국군이 가장 많은 병력을 잃은 지역이다. 7월 12일 현재 영국군 전사자 수는 총 3백14명인데, 그 중 3분의 1이 상진에서 사망했다. 정치인들과 장성들은 상진에서 철수하는 것을 “개편”이라 부르지만, 이 지역 작전권을 미군에 이양한 것은 실제로는 패배를 시인한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 영국군 수는 9천5백 명이고, 연말이면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증파가 완료되면 헬만드 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력을 퍼부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여전히 피 튀기는 난장판이며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지난 주만 해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인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아프가니스탄 군인 다섯 명이 사망한 데 대해 사과해야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끈 전쟁이 돼 버린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천 명이 넘는 미군이 사망했고 수십억 달러가 낭

비됐다.

미국은 탈레반을 주요 근거지에서 몰아내는 즉시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맡기겠다고 한다. 그들은 이를 전쟁의 “아프가니스탄화”라고 부르며, 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25만 명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에 〈타임〉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군 지원자 열 명 가운데 아홉은 소총 매뉴얼을 읽을 줄 모르며 차를 운전할 줄도 모른다 … 지휘관들은 일상적으로 부하 병사들의 월급을 빼돌린다.

“병사들은 미군한테서 지급 받은 전투화, 담요, 총기류를 동네 시장에 내다 판다. 때로는 탈레반에게도 판다 …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지원자들은 첫 휴가 때 탈영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대마초나 헤로인에 절어 산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스페인군 정례식

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분성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생계수단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군대의 연간 유지 비용은 60억 달러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연간 세수는 10억 달러밖에 안 된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미국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동원하는 것은 사기일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자원을 잔인하게 허비하는 짓이다.

미국과 영국의 지배계급은 전쟁 수행 방법을 둘러싸고 커다란 내분을 겪고 있다. 영국 국방장관 리엄 폭스는 “내가 보기에 이번 결정을 후퇴로 묘사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경멸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점령군이 이미 여러 차례 타격을 입은 뒤에 상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오바마가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을 해임한 것도 탈레반에 대한 공세가 실패한 뒤로 지배계급이 깊이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부정적

지금까지 병력 증파는 매번 실패로 끝났고,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군인 1만 5천 명이 투입된 마르자 공세 이후 탈레반은 단 몇 주 만에 마르자를 탈환했다. 마르자 공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61퍼센트가 나토 군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다하르 공세 계획은 최소한 이

번 가을까지 연기됐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점령군이 자신들을 지켜 주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점령군은 부패로 얼룩지고 대중에게 인기 없는 카르자이 정부를 지켜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카르자이는 탈레반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뉴욕 타임스〉의 최근 보도를 보면 카르자이는 “미국과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카르자이보다 더 믿을 만한 동맹을 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승패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이 걸려 있다. 오바마의 전략은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책임을 미국이 혼자서 짊어질 수는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점점 외로운 신세가 되고 있다.

오바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3만 명을 증파하기로 한 것이다. 다자주의에 관한 얘기는 쏙 들어갔다.

참전국 국민들의 반전 여론도 사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낸 영국에서는 국민의 72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전쟁은 앞으로 더욱 유혈낭자해질 수도 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나토 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맥크리스털 사령관은 “용감한 절제”라는 이름의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퍼트레이어스는 이러한 가식마저 벗어 던질지도 모른다.

지난주에 오바마는 해병대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장군을 퍼트레이어스의 후임으로 중부사령관 자리에 임명했다. 중부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중동 전역의 미군을 통솔하는 직책이다.

“카오스”, “전사 수도승”, “미친개 매티스” 같은 별명을 지닌 매티스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흉악한 전투 작전들을 수행해 온 오랜 전력이 있다. 2004년 4월에 그는 이라크의 팔루자 시에 대한 미군의 첫 공격을 지휘했고 팔루자를 폐허로 만든 포위 작전을 수립하는 데도 동참했다.

2005년 2월에 샌 디에고에서 열린 어느 공개 강연에서 매티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끝내주게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싸움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 사람을 쏘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매티스는 이 발언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학살을 총지휘하는 지위에 올랐다.

앞으로 점령군이 더욱 절박해지고 물불 안 가리게 되면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또 희생당할 것이다. 지금도 점령군은 사회기반시설들을 다치는 대로 파괴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생존 기반을 허물고 있다.

이 학살을 종식시킬 방법은 오직 하나, 나토 군을 전원 철수시키는 것이다.

번역 천경록

일본 참의원 선거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거부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11일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 이후 10개월 동안 민주당이 보여 준 행보에 대중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줬다.

참의원 2백42석 중 1백21석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44석을 확보해 참의원 단독 과반은 고사하고 여당 의석 과반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자민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와 비교해 13석을 늘렸지만, 이번에 확보한 51석을 포함해도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84석으로 민주당의 1백6석에 못 미친다. 정당 투표인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에 대한 환멸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다함게당 같은 신생 정당이었다. 자민당 출신 인사가 창당한 우파 정당인 다함게당은 민주당과 자민당을

동시에 공격해 10석(전체 11석)을 확보했다. 아마 여기로 민주당 이탈 표가 대거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격차와 빈곤을 양산해 온 자민당에게 정권교체라는 철퇴를 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건 민주당에 희망을 건 일본 대중에게 민주당은 실망만 안겼다.

‘육아수당’ 지급 공약 등의 복지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했으며,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낭비 예산을 줄여 마련하고 소비

세는 4년간 동결하겠다는 약속도 신임 총리 간 나오토가 폐기했다.

‘재정 파탄으로 그리스처럼 된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법인세는 4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소비세를 10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대중의 염원을 내팽개친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6월 초 간 내각 발족 직후 64퍼센트였던

지지율은 선거 직후 38퍼센트로 한 달새 26퍼센트 포인트나 하락했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내보유금(2백29조 엔)을 쌓아 온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5조 엔에 이르는 군사비나 3천억 엔이 넘는 주일 미군 지원 예산은 내버려 두면서도 국가 재정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정부에 많은 유권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최미선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중미 관계는 어디로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당초 안보리 결의안을 최대 목표로 제시했던 한국을 설득, 처음부터 의장성명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을 위해 외교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보다 중국을 동참시키는 의장성명이 실효적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

의장성명은 실질적으로든, 자의적으로든 관련 국가들이 모두 ‘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전망도 덧붙였다.

“백악관 성명 중 눈여겨 볼 문구는 ‘북한의 호전성에 직면해 대한민국이 보인 절제를 평가한다’라는 대목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평가지만, 유엔 성명 이후 향후 조치들에 대한 ‘절제’도 계속 당부하는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다.

“향후 한미군사합동훈련, 양자적·독자적 대북 제재,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작전 등 당초 계획된 후속 조치들의 수위를 예상할 수 있는 전조(前兆)일 수 있다.”

물론 이 기사가 전망한 대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고조된 미중 갈등이 빨리 완화될지는 좀더 두고 볼 문제다. 서로를 자극하려고 뱉어 놓은 말과 계획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의장성명 발표 전에 미국은 서해 한미 군사훈련에 초대형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군관료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술책이라 반발하면서 “원한은 언제가 복수를 낳는다”는 홍콩 경영화 〈무간도〉의 대사를 인용했고, 관영 언론은 항공모함 격침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힘자랑

그러자 미국도 대응 카드를 내밀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이렇게 보도했다.

“만약 중국의 위성과 스파이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지난주 베이징의 중국 해군 사령부에는 장군들의 심기를 자극하는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다. 미국의 초강력 병기들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돌연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과거 핵탄두를 장착하고 소련을 표적으로 움직여 온 오하이오급 잠수

함이었다.

“같은 날 U.S.S. 미시건호가 남한의 부산항에 도착한 것은 더 우려스런 일이었을 것이다. 또 같은 날 U.S.S. 플로리다호가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에서 부상했을 때 베이징 사령부의 비상벨은 정신없이 울렸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인근 해역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총 4백62기 탑재한 잠수함들을 파견한 것에 경악했다.”

미국의 목적은 자신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중국에 각인시키고,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모습을 주변국에 과시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는 자신의 힘자랑을 중국이 모른 척할까 봐 걱정해 평소 쉬쉬하는 자국 핵잠수함의 동향을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친절하게 통보해 주기도 했다.

이런 힘자랑은 이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힘자랑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단기적으로는 완화될 것 같다. 두 나라 간 갈등은 계속 고조되기보다는 몇 달 안에 있을 후진타오의 미국 방문과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서해 군사 훈련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징검다리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갈등의 정점이 될 것이다. 심지어 훈련 장소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군사 훈련의 수위와 6자회담 개최 여부를 포함해 〈연합뉴스〉기사가 예상한 것보다는 우여곡절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말이다.

그 이유는 먼저, 미국으로서는 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 해임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임명 소동으로 오바마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더더욱 이겨야 하는 전쟁’이 됐다.

미국외교위원회의 전문가는 퍼트레이어스가 2011년 여름으로 예정된 철군 시작 일정을 늦추도록 오바마에게 요청할 것이고 오바마가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선을 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최근 아이폰 납품 업체인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과 혼다·도요타 부품 공장 파업이 보여 줬듯이, 중국과 미국, 일본 등



2009년 11월 17일 중미정상회담 — 갈등과 타협을 반복해 온 아슬아슬한 두 나라 관계는 미래에 큰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서방 다국적 기업은 촘촘하게 서로 얹혀 있다.

또, 미국이 중요한 소비자 구실을 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 그것을 돕는, 2000년대의 세계경제를 움직여 온 커넥션은 경제 위기 발생 후 약해졌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버리는 ‘핵옵션’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연기한 것처럼, 지정학 전선에서도 지금은 갈등을 관리하려는 욕구가 좀더 우세하다.

잠재적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갈등이 순전히 ‘폼’일 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 둘의 타협을 낳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언젠가는 큰 갈등을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5년 안에 미국의 수출을 갑절로 늘려 경제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오바마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것이 좌절되면 미국 정부가 좀더 강

력한 경제적 보복 수단을 꺼낼 수 있고,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갈등까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군사력이 직접 대면하는 잠재적 충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뉴욕 타임스〉보도를 보면, 지난 4월 중국은 방중한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중국이 남중국해를 타이완, 티베트, 신장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핵심적 이해관계’로 보고 있음을 통보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잠수함 기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 미국 정부가 베트남·필리핀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도록 부추긴 데 반발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두 나라가 정면 충돌 부담 때문에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충돌을 오랫동안 피하더라도, 서로를 견제하려고 다른 지역에서 재앙적 선택을 하면서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최근 대표적 사례가 인도·미국 핵개발 협정과 이에 대항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차시마 핵개발 협정이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2008년 미국과 인도 사이의 민간 핵에너지 협정은 인도 정부의 오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34년간 금지된 대인도 핵거래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 협정은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로 해석됐다.

“[미국의 독일 마셜 펀드 연구원] 스몰은 중국에게 ‘견제자로서 파키스탄의 구실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스몰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차시마 협정을 논란이 많은 2008년 인도와 미국 핵개발 협정에 대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도의 부상과 인도·미국 간 협력 때문에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중국의 전통적 입장이 더 강조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과거 두 번이나 전쟁을 치른 핵무기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를 향해 더 많은 핵무기를 겨눌 수 있게 됐다.

곧 오바마와 후진타오가 웃으며 서로 약속하는 모습을 볼 때 속지 마시라. 그들은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을 가져다 줄 생각이 없다.

김용욱

그리스 파업에 ‘여름 휴가’는 없다

매튜 쿡슨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지난주 목요일[7월 8일] 오후 들어 여섯 번째 하루 총파업으로 그리스가 다시 한번 멈췄다.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이날 파업은 목요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그리스 사회당 정부의 연금 개혁법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그리스의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책들의 일부로,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IMF와 유럽연합은 그리스 금융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1천1백억 유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엄청난 재정 삭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을 깎아

내리는 조치들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반자본주의 주간지.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총파업으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교통도 말이죠.

“그래서 파업 행진에 참가하러 아테네 시내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시위 규모도 그래서 5월 5일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긴축 계획을 관철하려면 앞으로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주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사회당 정부는 사회당 의원들이 연금 개혁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통제할 수 있었던 덕분에 한시름 뉘었습니다.

“정부는 의회에서 노동자 공격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그리스 정부는 여름 동안 투쟁이 잠잠해지기를 바란다. 전통적으로 그리스에서 여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러나 파노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많은 투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와 아테네 대중교통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병원 지원비 삭감을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노조는 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5일 동안 파업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연맹들은 9월 살로니카 국제 박

람회에서 총리가 연설할 때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다음번 투쟁 초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탄약 생산 노동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도 화요일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지자체 노동자들은 긴축에 항의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시청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주 목요일에 수십만 명이 업무 거부 행동을 하고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의 일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잠잠한 여름’은 없습니다.

“다음주 아테네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립니다. 이 시위는 긴축 정책과 인종차별을 거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는 그리스인들이 긴축 정책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여 줬다.

한 우익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79퍼센트는 그리스 경제 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 긴축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리스인 72퍼센트는 정부가 좀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57퍼센트는 정부의 개혁이 주로 은행과 채권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퍼센트가 그리스 사회당이나 우익 신민주당 모두 그리스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번역 김용욱

진보교육감이 내 아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나예젠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시험을 통해 자기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불쾌해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머리모양을 일률적으로 통제할까 봐 걱정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리 아이에게 얼마 전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서 진보 성향의 광노현 교육감이 당선한 것이다. 아이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교육감 선거결과가 발표되는 날 학교 컴퓨터실에서 당선 결과를 확인한 뒤 나에게 알려 주면서 무척 기뻐했다.

물론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광노현 교육감의 모든 정책을 안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복을 입지 않고 머리모양을 일률적으로 통제받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정당에 가입·후원한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에 맞서 올



6월 21일 강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광노현 교육감 “일제고사 안 보게 해 달”라는 이 아이들의 바람을 지켜줘야 한다.

곧게 싸우지 못하고, 일제고사 선택권을 분명히 옹호하지 않는 광노현 교육감의 모습을 보며 과연 그가 제시한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싸우고 있다. 지금 정부의 전교조 공격도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전교

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후원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매우 정당한 정치활동인데도 “실정법 위반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며 전교조 방어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는 자본가 정권이 만들어 낸 억지에 밀려 진보적 공약들은 계속해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진보적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난 진보교육감을 그토록 원하고 그의 당선에 기뻐했던 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아이들이 ‘진보교육감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패배의식에 잠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내 생각이 기우이길 바란다.

이호성



7월 9일 아수나로가 주최한 일제고사 반대 집회

아수나로 마녀사냥 종단하라

부패·경쟁교육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자,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활발해질까 봐 두려운 우익들이 청소년들을 속죄양 삼아 진보교육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일제고사 거부 청소년 거리집회를 주최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를 “진보교육감의 외각 응원부대”고 “학교 자퇴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공격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아수나로’의 활동에 대해 “학생 신분을 넘어서서 일탈의 정치성 주장… 방임하는 교사, 학부모들의 자세에 허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비난했다.

보수언론은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우려스럽다”며 배후설을 꼬집어 내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이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하자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수나로 공헌 활동가는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보수언론”, “청소년들이 미성숙해 보인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에게서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박탈한 사회 제도의 탓이 더 클 것”이라며 보수언론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소년들을 점점 더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인권에는 관심도 없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말로 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모는 진정한 ‘배후다’.

이슬기

양심수의 편지

〈레프트21〉 오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동안 〈레프트21〉을 무료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한 차례, 오후 한 차례 우편물을 받는데 면회 호출이 오거나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방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더군요.

구속되고 시간이 흐름수록 밖과 멀어지다 보니 어떨 땐 우편물 하나에 하루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무료로 계속 받아 보는 게 죄송하기도 해서 지난번에는 아무런 답신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네요.

1년여 끌어오던 재판도 모두 끝났고, 7월 중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갈 듯 한데, 옮기게 되더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리시겠지만 징역생활이란 게 밖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건 못하게 되고, 하려고 해도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더군요.

책을 읽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고, 여러 단체들의 정치적 경향을 다시 살펴볼 수도 있어, 이 모든 게 징역이 주는 많은 시간을 덕입니다.

다함께는 집회 현장에서 보는 팻말을 통해 자주 만났을 뿐인데, 이곳에 와서는 〈레프트21〉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나게 구석구석 읽고 있고, 그런 신문을 보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레프트21〉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010.7.1 서울구치소 문헌준 드림

교사·공무원 탄압의 기세가 꺾였는가?

〈레프트21〉 35호 기사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는 그 제목처럼 징계 시도의 기세가 꺾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런 지적은 선부르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교조·공무원노조의 투쟁과 징계에 부정적인 여론 덕분에 전교조·공무원 징계 시도가 정부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호 〈레프트21〉이 나온 직후, 사법부는 2008년 주경복 교육감 선거 운동으로 기소된 교사들의 항소심에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파면이 가능한 형(징역형,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노현 등 진보 교육감들이 취임한 7월 1일에 자행된 이 ‘사법 학살’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판결은 분명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자신감과 기대가 높아진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사와 공무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계급의식적 판결이다.

김인숙 동지의 글은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씌였지만, 사태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했다면 이번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장 이번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과부는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방침을 밝힌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게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미 김상곤 교육감이 직무 정지 위협을 받고 있고 광노현 교육감도 그럴 위협이 있다(얼마 전 우파인 바른

교육국민연합이 선거법 위반으로 광교육감을 고발했다).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재판이 여럿 진행중이고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또, 진보정당 후원으로도 교사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서게 될 것이다.

팽팽한

국가 탄압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에 공공부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공격이 지배자들 뜻대로 순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의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급 세력균형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탄압이 금세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파들의 계속되는

공세를 비판하고 이런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한다. 국가 탄압을 너무 크게 보는 것은 문제지만,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사·공무원 탄압이 물건너가기라도 하는 양 낙관하는 시각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정진희

답변) 해당 기사의 제목이나 뉘앙스는 필자 김인숙의 글을 신문 제작 과정에서 추악·교열하면서 다소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방선거 패배와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 이명박 정부의 징계 시도가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서 독자들에게 저항의 자신감을 고취하려 했다. ‘탄압이 물건너가서 저항이 불필요함’을 말하려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추악·교열 과정에서의 변화가 일부 오해의 소지를 준 듯하다.

전지윤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나는 7월 5일에 대한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사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평생 고통 받을 당사자도 여성”이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할지 말지는 국가도, 배우자도, 의사도 아닌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옹계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서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개정안은 임신 12주까지 산모의 요청에 의해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



7월 5일에 열린 낙태법 개정 토론회

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임신 12주부터 24주까지는 의학적 사유와 성폭력 피해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절차상 숙려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임신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예외로 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의 지적처럼 임신 12주 이후 낙태에 대한 제약은 “산모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

지와 거리가 멀다.”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을 요구하고 사전 상담·숙려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선택권이 제약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정안에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사유가 5~10점에 머물고 심지어 강간에 의한 임신도 수술 가능 점수인 30점에 크게 밀도는 10점에 불과하다. 강간 피해 입증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도 문제다.

또,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신초 수술 시기를 놓친 청소년 등 뒤늦게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다.

진정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출산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낙태 사유와 임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낙태 합법화가 필요하다.

이예송

10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진보 포럼

맑시즘2010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7.22(목)-25(일) 고려대학교 주최: 다함께

맑시즘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다채로운 진보 포럼입니다.
10년을 맞은 **맑시즘2010**, 올해도 활동가들과 진보적 학자들이 총출동합니다. 여러분을 설레게 할 65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에너지 충만한 토론이 오고 갑니다. 나흘 동안 1천5백 명이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의 대안을 고민하는 곳, 활짝 문 열고 기다립니다. 맑시즘을 만나러 오세요.

- 알파배기 주재 65가지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일반 이론까지
-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연사들 활동가와 진보적 학자들이 풀어놓는 연구 성과, 경험, 방향 제언
- 패널 논쟁으로 진보운동 내 논점을 한눈에 핵심 논자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민주적이고 열린 청중 토론 모든 참가자들에게 3~4문의 발언권 보장

끝나지 않은 위기

좌파 현대세계경제론의 비판적 재구성
— 허비, 아리기, 브레너를 중심으로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미래
김동훈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인가?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제 끝났는가?

정사복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재정 위기와 공공부문 '선진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가) 공동집행위원장

정종남 다함께 활동가,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정성진 유철규 신정환 이정구 김동훈 정사복

개막식 위기의 시대, 저항을 말하다

사회: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전지운 <레프트21> 기자

이민숙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덕업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등 진보운동 활동가들이 연설합니다.



놓칠 수 없다! 대가의 명강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 5·18에서 1987년까지

한홍규 <대한민국사> 저자

노동운동은 여전히 희망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경제 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김진숙 <소금꽃나무> 저자

트로츠키의 사상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내 최초 트로츠키주의자

상성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가?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성범직 · 사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정책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부동산 거품,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대안을 모색한다

케인스주의는 무엇이고 경제를 구할 수 있는가?

유철규 상공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스웨덴 모델 — 복지국가의 역사와 교훈

신정환 상공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정호중 <레프트21> 기자

금융세계화 — 금융의 발전으로 자본주의가 변했는가?

김동훈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발전국가 논쟁

— 박정희 시대의 개발 정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김창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김신영 상공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이상우 다함께 활동가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패널토론 진보운동의 길을 묻다



이호중 우석균 김진경 이문경

진보진영 정치대편 논의

—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외

87년~97년~08년 체제 논쟁과

진보진영에 주는 함의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희연 상공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낙태 — 최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진희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88만 원 세대의 운동론 모색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G20 서울정상회의 —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 에너지 · 사회 체제 전환과 녹색 일자리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 정호중 <레프트21> 기자

마르크스주의 시리즈 강좌

마르크스주의의 ABC — 왕초보를 위한 자본론 마르크스주의의 ABC — 마르크스의 방법

① 부는 누가 만드는가? —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②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AT 시리즈
① 계급과 억압 ②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③ 국가자본주의 ④ 제국주의 ⑤ 국제주의

① 소외
② 유물론과 변증법
③ 트로츠키 ④ 마르크스
⑤ 로자 룩셈부르크 ⑥ 레닌

뜨거운 현안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만남

격동하는 세계

변화하는 세계 체제

— 미국의 세기인가, 다국화된 세계인가?

조셉 추나라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지각 변동 중인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김하영 <마르크스21> 편집자

네팔언에서 티베트, 혼다 파업까지

— 중국의 저항운동

김용욱 <레프트21> 국제 문제 담당 기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연속혁명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조셉 추나라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반자본주의신당 NPA — 프랑스 급진좌파의 새로운 지평

이기중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여성/성 해방을 위한 투쟁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

박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심선혜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보육분과장

여성 억압의 근원 — 여성은 왜 차별 받는가?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누가 왜 동성에 혐오를 조장하는가?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다른 교육 관련 학교를 꿈꾼다

비교초기와 참교육 — 핀란드 교육의 비밀

천보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다른 교육을 위한 투쟁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

대학 기업화와 학문 공동체의 붕괴, 그에 맞선 저항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 토론교실

① 청소년, 숨막히는 학교를 말한다

김인식 고교, 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 학생모임 활동가

한효주 중교, 청소년다함께 활동가

② 우리 교실 이주민 친구들

이은하 외국인 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집행위원

③ 어, 기후가 왜 이래?

김성보 경주중학교 과학 교사

④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한홍규 <대한민국사> 저자

이주/민권 외

이명박 정부의 이주 정책과 인종주의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세계는 왜 이토록 가난한가?

박건희 <레프트21> 기자

사회적 공헌으로 기업은 착해졌는가?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분단과 한국전쟁

한규현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대학원 역사학 전공

22일 목	5:00 ~ 6:20 [5:00~6:30] 노동운동은 여전히 희망인가?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5:00~6:30]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사회적 공헌으로 기업은 착해졌는가?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마르크스주의의 ABC — 마르크스의 방법 ① 소외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레프트21> 발행인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AT 시리즈 ① 계급과 억압 — 마르크스주의는 환원론인가?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7:30 ~ 9:30 개막식 — 위기의 시대, 저항을 말하다 더블딤 가능성이 점쳐지는 세계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세계 지배자들(G20), 심화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 이에 맞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사회: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전지운 <레프트21> 기자 이민숙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덕업 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등 진보운동의 활동가들이 연설합니다.
----------	--



문화행사

영화
켄 로치, <룩킹 포 에릭> Looking for Eric, 2009
마이클 무어, <자본주의: 러브스토리>
Capitalism : A Love Story, 2009

문학

24일(토) 오후 9:10~10:20

에스플라다 알레그리아 복철과 함께하는

저항의 브라질 음악을 만나다 '삶은 위대하다!'

음악

23일(금) 오후 9:10~10:20

에스플라다 알레그리아 복철과 함께하는

저항의 브라질 음악을 만나다 '삶은 위대하다!'

사진전

24일(토)~25일(일)

· 2008~2010 언론노동자 · 시민 사진전

국민, 대한민국을 짊어

·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강은 살아 있다

(최병성 목사와의 대화 - 25일(일) 오후 2:20)

놀이방 · 서점 등

· 좋은 사회과학 서적을 대폭 할인 (10~50퍼센트) 판매합니다.

· 어린이 놀이방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휠체어를 무료 대여해 드립니다.

· 숙소 안내가 필요한 분은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rxism.or.kr 에서 확인하세요.

23일 금	10:00 ~ 11:30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 5·18에서 1987년까지 한홍규 <대한민국사> 저자 성범직 · 사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00 ~ 1:4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연속혁명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O 시리즈 ① 트로츠키의 사상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내 최초 트로츠키주의자 [12:00~1:30] 대학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붕괴, 그에 맞선 저항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12:00~1:20]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인가?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40 ~ 4:00 경제 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김진숙 <소금꽃나무> 저자이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2:40~4:10] 마르크스주의의 ABC — 마르크스의 방법 ② 유물론과 변증법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AT 시리즈 ②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백은진 다함께 활동가 금융 세계화 — 금융의 발전으로 자본주의가 변했는가? 김동훈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세상은 왜 이토록 가난한가?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4:30 ~ 5:50 [4:30~6:10] 88만 원 세대의 운동론 모색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분단과 한국전쟁 한규현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대학원 역사학 전공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제 끝났는가? 정사복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O 시리즈 ③ 국가자본주의 — 옛 소련과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인가? 차승일 제간 <마르크스21> 편집위원 7:00 ~ 8:50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이제 막 시작인가? 조셉 추나라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 저술가 G20 서울정상회의 —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 의료 민영화 어떻게 하고, 의료보험 보장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김진경 전 서울대병원노조 위원장 이문경 새사민 사회정책 · 보건의료분야 연구원
----------	--

놀이방 · 서점 등	7:00 ~ 8:50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진보진영 정치대편 논의 —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레프트21> 발행인 외 한국 노동운동의 전략을 말한다
------------	---

24일 토	10:00 ~ 11:45 낙태 — 최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진희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케인스주의는 무엇이고 경제를 구할 수 있는가? 유철규 상공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2:00 ~ 1:40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12:00~1:50]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 에너지 · 사회 체제 전환과 녹색 일자리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호중 <레프트21> 기자 [12:00~1:25] 지각 변동 중인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김하영 제간 <마르크스21> 편집자 [12:00~1:25]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미래 김동훈 <레프트21> 경제 담당 기자 2:40 ~ 4:00 [2:40~4:10] 이명박 정부의 이주 정책과 인종주의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욱 <레프트21> 국제 문제 담당 기자 성서 억압의 근원 — 여성은 왜 차별 받는가?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마르크스주의의 ABC — 왕초보를 위한 자본론 ① 부는 누가 만드는가? —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김정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O 시리즈 ⑤ 레닌 이수현 <레닌 평전2, 3권(해갈과) 역자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 토론교실 ② 우리 교실 이주민 친구들 이은하 외국인 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집행위원 5:00 ~ 6:20 [5:00~6:30]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 박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심선혜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보육분과장 다른 교육을 위한 투쟁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발전국가 논쟁 — 박정희 시대의 개발 정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김창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4:30~6:10]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김신영 상공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이상우 다함께 활동가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AT 시리즈 ④ 제국주의 김하영 제간 <마르크스21> 편집자 마르크스주의의 ABC — 왕초보를 위한 자본론 ②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김어진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O 시리즈 ④ 로자 룩셈부르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7:00 ~ 8:50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니코스 루도스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진보진영 정치대편 논의 — 연합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레프트21> 발행인 외 한국 노동운동의 전략을 말한다
----------	---

25일 일	10:00 ~ 11:45 [10:00~12:00] 87년~97년~08년 체제 논쟁과 진보진영에 주는 함의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희연 상공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스웨덴 모델 — 복지국가의 역사와 교훈 신정환 상공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정호중 <레프트21> 기자 [10:00~11:20] 부동산 거품,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12:10 ~ 1:50 [12:10~2:00] 변화하는 세계 체제 미국의 세기인가, 다국화된 세계인가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좌파 현대세계경제론의 비판적 재구성 — 허비, 아리기, 브레너를 중심으로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2:10~1:30] 비교초기와 참교육 — 핀란드 교육의 비밀 천보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12:10~1:30]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3:20 ~ 4:40 상성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가?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네팔언에서 티베트, 혼다 파업까지 중국의 저항운동 김용욱 <레프트21> 국제 문제 담당 기자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주의의 진정한 전통 WHO 시리즈 ⑥ 레닌 이수현 <레닌 평전2, 3권(해갈과) 역자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 토론교실 ③ 어, 기후가 왜 이래? 김성보 경주중학교 과학 교사 6:40 ~ 7:40 폐막식 ※ 포럼 주제는(연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www.marxism.or.kr

전화 02-2271-2395 문자 메시지 문의 010-2208-2395
marxism2010@marxism.or.kr

참가비: 하루 13,000원(22일만 7,000원) 나흘 40,000원

- 대학생 할인 하루 11,000원(22일만 5,000원) 나흘 30,0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 하루 5,000원(22일만 3,000원) 나흘 15,000원

10명 모아 할인 반자! 단체할인!

- 동아리 · 학생회 · 노동조합 · 소모임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 나흘 티켓을 구입하면 15퍼센트 추가 할인!
- 단체할인가 34,000원 ● 대학생 25,5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12,500원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1-04-089255 우라은행 1002-630-301082 하나은행 289-910002-67105

우체국 011728-02-129945 신한은행 110-177-868260

맑시즘2010을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 맑시즘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배너 등 다양한 웹 광고물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시민회의

건강연대

장호중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에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은 “1백만 원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새로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전 정책위원장 등은 이 안을 중심으로 건강연대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 시민회의 등 보장성 강화 운동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연대가 배포한 제안서를 보면 제안자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회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자 보험료 인상보다는 기업주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제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상위 1천 개 기업에 연매출의 0.5퍼센트 가량을 사회연대각출금으로 부과하고 제약회사 광고료의 10퍼센트, 민간보험회사 수입의 1퍼센트를 세금으로 거두자는 것이다. 위스키, 코냑 등 고급 술과 담배 등에 부과하는 ‘건강위해세’도 포함됐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단히 급진적인 제안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노인·저소득층 보험료를 경감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해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일부 인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백만 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병실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서비스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 제안에는 시민회의의 제안에선 찾아볼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병원에 지급하는 보험재정의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고 하나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제한하는 ‘포괄수가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재정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약값을 인하는 안도 포함됐고 공공병원 강화 계획도 들어있다. 도시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모

든 개인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급진적인 제안도 있다.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통합적 사회운동’ 건설을 제안했다.

신영전 정책위원장 등의 새로운 제안은 지난 10여 년의 건강보장운동의 성과와 정신을 계승하고 운동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제안이다. 대중적 지지를 받아 온 무상의료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요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 노동자 운동이 중심점 구실을 해야 한다.



이중의 고통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한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시민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반론을 폈다.

그는 비판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민회의의 제안 취지가 첫째, 풀뿌리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회의의 제안대로라면 ‘풀뿌리’들이 할 일은 고작 보험료를 더 내는 것밖에 없다. 운동의 요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요구하자는 주장은 풀뿌리 운동을 자극하기보다는 운동을 분열시킬 공산이 크다.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서 보장성이 낮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진영과 보건의료 운동

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들은 모두 그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오건호 위원은 이런 주장은 의료공공성 강화 운동이 대중적 요구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논점회피

시민회의 측이 계속 논점을 회피하려 하지만 문제는 병원비 걱정을 어떻게 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운동은 경제 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주범이자 그 와중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기업주·부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 왔다.

반대로 시민회의 측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다. “만약 [그동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더 낮은 보장성과 더 커진 본인부담금 몫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다.”(오건호)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도 자동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

려에 대해 오건호 위원은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수입구조는 보험료, 사용자 몫, 정부지원금이 일정 비율로 연동되어 있다(직장가입자 경우: 가입자 5, 사용자 5, 정부 2). 따라서 가입자의 보험료만 오르는 경우는 없다. 보험료 인상은 정부, 기업의 책임 몫을 동시에 확정한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듯이,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심의 위원회에 민주노총 자격으로 참석했던 오건호 위원 자신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온 당사자다.

국가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간접세로 충당되며 국고 지원이 보험료 인상보다 진보적일 것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고 지원을 늘리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를 인상함으로써 불평등한 현행 조세 제로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연대의 개혁안에 사회보장제가 포

함된 까닭이다.

그런데 오건호 위원은 사회보장제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안도 “지혜롭지 않다”고 비판한다.

“건강보험 제도 내부에서 보장성 확대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이처럼 기존의 국가 재정 운용과 조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복지를 개선하려다 보니 노동자 보험료 인상이라는 잘못된 길로 간 것이다.

근본에서 이는 ‘보편적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대안과 투쟁을 정책적 대안과 실용주의적 타협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나서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나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운동 건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정치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운동의 일부로서 복지를 자리매김하지만 후자는 이를 따로 떼어내 보험 계수 조정 문제로 환원해 버린다.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제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고용 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예컨대, 영국은 정부 지출을 무려 25퍼센트나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G20 캐나다 정상회의에 맞선 항의 운동에 참여했던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G20 정상들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수차례 총파업에 나서며 반대한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을 지지하며 긴축을 G20 국가들이 따라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

루그먼은 긴축 정책 기조가 확산되는 것은 합리적 분석과는 상관없는 통설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긴축 정책을 단행한 그리스의 경우 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을 단행한 아일랜드는 긴축 정책 시행을 꺼리는 스페인보다 더욱 위험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긴축은 단지 유로존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긴축을 향해 나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파이낸셜뉴스) 창간 10주년 인터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13~2014년 중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채무는 2013년까지 GDP 대비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나마 쥐꼬리만 한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윤증현은 이미 그리스 재정 위기는 “포퓰리즘의 폐해”라며 “정부가 복지부문 등에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G20 캐나다 정상회의 항의 시위

보건복지부는 벌써부터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현행 전체의 7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G20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은 G20과 IMF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철구

11월 11일,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 줘야

7월 9일 개최된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이 워크숍 취재기는 〈레프트21〉 온라인 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에서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11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노총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 G20 항의 운동은 소규모에 그칠 공산이 크다.

G20 경호특별법까지 발동해 G20 항의 운동을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위협 속에서 G20 항의 운동이 대규모로 조직되려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규모 참가가 관건이다.

세계 주요 지배자들이 모여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맞서 한국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저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보낼 책무가 있다.

캐나다 G20 정상회의 항의 운동에 참여한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국제시민사회가 G20 한국 정상회의에 맞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 진영 전체가 단결해 대규모 저항 행동

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는 대규모 항의 운동에 부딪혔다. 2009년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 때는 3만 명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는 2만 5천 명이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사회 정의를 외쳤다.

한국 노동운동도 2000년 아셈 항의 투쟁, 2004년 세계경제포럼 반대 시위, 2005년 아펙 반대 투쟁에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이런 전통이 올해 11월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 해마다 11월 노동자대회는 노동자 수만 명이 모여 당시 가장 뜨거운 사회·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밝히고 위력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올 하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다름아닌 G20 정상회의다.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면, 민주노총이 이 쟁점을 회피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G20 항의 투쟁을 2010년 핵심 투쟁으로 선정한 김영훈 민주노총 지도부의 계획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강철구

쌍용차 졸속 매각 저지 워크숍



이날 워크숍에서 공기업화 요구에 대한 노동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 보장 대안을 둘러싼 논쟁

7월 2일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워크숍에 쌍용차 조합원 등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자동차 산업 현황과 르노닛산 동향’(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연구원)과 ‘대책위의 사업방향과 투쟁 계획’(쌍용차지부 사무장) 발제가 있었고 다함께·사회진보연대·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 대다수는 해고자 복직, 고용승계 등 일자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르노닛산 등 쌍용차 인수 경쟁에 뛰어들어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에 공감했다.

구조조정

그러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두고는 차이가 있었다.

사노위측 발표자는 “노동자들에게 매각은 독이자 약이 될 수 있다”며 매각을 기회로 이용해 고용안정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투쟁

하자고 주장했다. 해고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이라는 대안은 기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쌍용차의 두 차례 매각 경험에 입증하듯이 매각 자체가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이윤을 얻기 위한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런 매각을 ‘약’이나 기회로 이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회진보연대측 발표자는 졸속 매각 반대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적절치 않은 슬로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에서 매각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 인수 기업과 ‘고용 유지 및 확대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상하이차가 약속했던 ‘고용안정’도 금세 휴지조각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함께측 발표자였던 나는 “현재 형식상 공기업인 쌍용차를 매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경제 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주들을 정부가 구제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기업화를 요구하며 운동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나는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 등의 경험과 볼리비아의 모탈레스 정부 등 남미의 공기업화 사례를 들었다.

발제 후 청중측 발언의 대부분은 공기업화에 관한 것이었다.

쌍용차 조합원들의 발언 중에서도 공기업화가 일자리를 보장할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꽤 나왔다.

한 조합원은 “우리의 투쟁 대상은 정부다. 우리가 원하는 복직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며 공기업화를 지지했다. 어떻게 하면 공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기업화에 부정적이었던 급속노조 간부도 “오늘 워크숍에서 전략적 과제인 공기업화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일자리 보장을 위한 투쟁의 대안에 쌍용차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승훈

여성운동이 낙태 선택권 요구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정책 이후, 여성들은 비싼 낙태 비용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실질적인 낙태 처벌을 위해 징역형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신설하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곧 낙태 시술 병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정부도 “불법낙태 근절 의지는 변함없다”며 단속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낙태법을 개정하겠다고며 만든 법제위원회에서는 낙태 허용 사유를 늘리는 방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낙태 처벌 반대 진영은 이런 흐름에 맞불을 놓으려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7월 21일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선언식에서는 낙태 처벌 반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허용을 요구할 것이다. 여성의 요청 이외의 다른 제약—낙태 시술 전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도입, 배우자 동의—에 모두 반대하고, 여성 노동자와 빈곤 여성들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낙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에 이르지 않도록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3월 4일 낙태권 네트워크가 주최한 기자회견. 낙태 선택권을 더 분명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발

한편, 처벌반을 위협에 처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도 크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임신 12주 이내까지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물론 정부와의 타협을 미리 염두에 두다 보니 이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12주 이후의 낙태는 여러 제한을 뒀고, 사전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낙태의 여러 사유에 차등 점수를 매겨 여성의 요청 이외에 다른 제약조건을 두려 한다는 점,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 등은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문제”라는 그들의 주장과도

모순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조차 ‘프로 초이스’(선택권 옹호) 진영이라고 자처하며 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여성운동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낙태권은 여성이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저출산 등 가족의 위기 속에 낙태하는 여성을 공격해 보수적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낙태권 허용 요구를 적극 지지하자.

최미진

네트워크 선언식: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청계광장(변경될 수 있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급진 좌파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활동가들은 쌍용차 공기업화 요구가 “홍보 논리”일 뿐이라거나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경제에 개입해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거나 기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이에 대한 분노가 확대되면서, 저항에 나선 그리스 등의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사회복지 확충, 금융통제를 위한 국가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도 자본주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주의자들은 공기업화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교리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이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

소유

그러나 한국에서도 도로·철도·전력·상수도 등 여전히 많은 산업이 국가 소유라는 점을 볼 때, 공기업화가 꼭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2차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대대적인 공기업화 정책은 특별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후에 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으로 공기업화를 채택했다(이것은 이른바 “완전 고용”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 애틀리 정부는 파산 직전에 놓인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했다. 그것 말고는 잇따른 파산 위기에서 영국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와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려는 공기업화 요구를 순수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거대하고 강력한 대중행동과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과 제도 개선에 치중하는 개혁주의자들은 대중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공기업화 요구를 부담스러워한다.

한편, 급진 좌파의 일부는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기업화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업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중요치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쌍용차 같은 부도기업에선 불가피하게 소유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기업이든 국가든 똑같다’며 이 문제를 회피하면 결국 구조조정을 낳을 제3자 매각 시도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부분이며, 결코 시장에 대항하는 세력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적어도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게다가 부분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이런 압력과 반발에 밀려 철도·발전·가스 등의 민영화 계획을 10년 가까이 미뤄 왔다.

최근엔 정부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지난해 철도 파업이 광범한 민영화 반대 여론 속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은 것이나 보편적 복지 요구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공기업화’가 자본주의 현실에 안주하는 개혁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중반에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의 즉각적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이을 ‘이행기 요구들’을 정식화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적 조치들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 강령’과 미래의 사회주의의 약속을 담은 ‘최대 강령’ 사이의 격차를 극복할 가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경제 위기 시기에 행동강령으로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요구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공기업화가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는 자본주의 수익성 논리에 도전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투쟁은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의 가능성을 넓힐 것이다.

운동발전의 동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파주의자들은 이런 가교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트로츠키는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꼬집었다.

“종파주의의 정치적 무기력은 마치 그림자처럼 기회주의의 무기력을 보충한다. 그리고 전혀 혁명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 ... [이들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대중투쟁을 통한 공기업화 쟁취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박설

이슬람 혐오증은 왜 나타났는가?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가** 7월 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말시즘 대회에서 '이슬람 혐오증의 위험성'을 주제로 연설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지금, 전쟁 정당화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인 '이슬람 혐오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싣는다.

“우리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30~40년 전에 누군가가 이슬람이나 종교가 토론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웃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냉전기 동안 제국주의 나라들(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신의 적에 맞서는 필수적 방어벽으로서 정치적 이슬람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칭 ‘이슬람적’ 조직들을 이용해 자신의 적을 공격했다. 미국은 중동의 세속적 민족주의,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 남아시아(주로 파키스탄, 유일한 사례는 아니지만)의 급진화 물결에 맞서 이슬람 조직들을 이용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이슬람 혐오증은 주로 서방 세계에서 새롭게 적을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슬람 혐오증은 진실을 알 만한 고위층 인사들과 이슬람 혐오증을 이주자를 반대하는 데 이용하는 극우파들이 창조한 것이다.

이슬람 혐오증의 양상은 다양하고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에 도전해야 한다.

무슬림들에 반대하는 이른바 ‘대중’ 여론 문제부터 살펴보자. 내 생각에 이 정서는 근본주의나 ‘이슬람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 특히 제2차세계대전 뒤 유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하는 적대감과 관계있다.

이주자들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20세기의 첫 50년 동안 유대인에 반대해 이용된 주장과 상당히 닮았다.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들은 다른 문화 출신이다. 그들은 종교가 다르다. 그들은 안식일이 다르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는다는 주장 말이다.

오늘날에는 무슬림에 반대해서 매우 유사한 주장이 이용된다.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들은 ‘타인’이다.

테러리즘

반복해서 제기되는 쟁점은 테러리즘이다. 나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영국에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퍼센트는 ‘무슬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테러리스트’라고 답했다. 이런 여론조사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1920년대나 1930년대에 실시됐다면, 사람들은 십중팔구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 생각나는 단어가 ‘볼셰비키’라고 답했을 것이다. 오늘날은 ‘유대인 볼셰비키’가 아니라 ‘무슬림 테러리스트’라는 점만 다르다.

평범한 유대인이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들은 볼셰비키이거나 백만장자이거나, 둘 중 하나로 여겨졌다.

우리는 무슬림에 관해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종종 듣는다. 무슬림은 런던 사교클럽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며 자기 나라의 국부를 탕진하는 부유한 아랍 왕자이거나(분명히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무슬림 테러리스트’다.

세계의 모든 집단처럼 무슬림 지역 출신자들 중에서는 이 양극단 사이에 서로



이슬람 사원 건설을 반대하는 영국의 극우 조직 회원

크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무슬림 지역 출신자이더라도 신앙인도 있고 비신앙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문화적 형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히잡을 착용하는 많은 젊은 여성과 대화해 봤다. 그들은 착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히잡을 착용한다. 특히 프랑스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일

어난 일에 관해 서유럽인들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는지 생각해 보라.

그런 교육은 뇌리에 깊이 각인돼, 심지어 일부 어리석은 정치인들 예컨대 토니 블레어는 제2차세계대전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담긴 무지함과 냉소는 엄청나다. 제2차세계대전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졌다.

그들은 유대인을 구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폭격을 요청했는데도 그들은 단 한 곳의 강제수용소에도 폭격기를 보내지 않았다. 독일의 파괴라는 주요 임무에서 폭격기를 이탈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배우는 내용은 너무 피상적 이어서 반유대주의의 기원은 토론도 되지 않는다. 그런 교육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른 소수자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의 문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명백히 없었다.

이슬람은 유럽 역사와 관계없는 종교나 문화가 아니다. 내가 쓴 <이슬람 5종주>는 유럽 문화에서 이슬람이 정상적이고 중요한 일부였고 지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문화였음을 보여 주는 역사 소설이다.

15~16세기에 이베리아 반도[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축출되면서 유럽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창조됐다. 오늘날 이 정체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를 구해 이주하는 무슬림들(주로는 과거 서방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나라 출신)의 새로운 유입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설 새 없이 비방하는데, 이에 저항해야 한다. 한때 좌파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국제 엠네스티가 관타나모 수용소의 정치수를 방어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치수들이 여성주의에 옳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래서?

논쟁하면 될 것 아닌가? 정치수들에게 관타나모에서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컨대 많은 독일 녹색당원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여성 해방이 목표였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히틀러에게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이 아니었듯이,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과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서방의 이익을 지키고 방어하려는 것이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상황을 알고 있다. 독일은 이주자들을 ‘손님 노동자’라고 부른다. 이 말은 괜히 쓰는 것이 아니다. 손님이라면 언제든 떠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이주민들은 프랑스 시민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할 때는 차별받는다.

공격

프랑스에서 경찰이 이주자들을 공격하거나 죽일 때, 프랑스에 잘 통합된 젊은 이주민들은 다른 프랑스인들이 억압당할 때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그들은 재산을 공격하고 바리케이드를 쌓고 스스로를 방어한다. 프랑스 역사는 이런 것을 빼고 논할 수 없다.

미국은 이주자의 나라다. 미국에는 두 새로운 이주민 집단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 혐오증은 9·11 후에 크게 강해졌다.

FBI는 이주민 사회에 침자를 심어 이주자들을 늘 감시한다. 젊은 이주민들은 특히 검문을 당한다. 이 모든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똑같은 일이 영국에서도 벌어진다.

영국에서는 의회에도 무슬림이 있고 좌파 단체에도 무슬림이 있다. 이는 자연

스러운 일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구분되지 않는 거대한 블록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2005년 6월 런던 폭탄 테러 후에 우리는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신노동당의 네오콘 추종자들은 이슬람에 폭력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테러가 난 바로 다음날에 테러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테러의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테러의 원인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돕기로 결정한 블레어의 외교 정책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영국과 미국의 모든 정보 기관도 보고서에서 비슷한 지적을 한다.

이슬람 혐오증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유용하다. 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혐오증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되는 잔혹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감자들이 말하듯 관타나모 수용소의 상황도 끔찍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카불 외곽에 있는 바그람 감옥에서는 훨씬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슬람 혐오증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이슬람 혐오증은 끔찍하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그리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당신도 무슬림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주류 언론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꽤나 공개적으로 이용한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 그리고 유럽의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바락 오바마는 전 세계에서 부시의 정책을 계속 따라하고 있다.

이슬람 혐오증이 영원히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슬람 혐오증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적절한 때가 오면 다시 사라질 것이다.

이슬람 혐오증은 현재 미국이 중동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 정치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나라들을 점령하려면 이슬람 혐오증이 필요하다. 미국에게는 ‘테러와의 전쟁’이 ‘악’에 맞선 전쟁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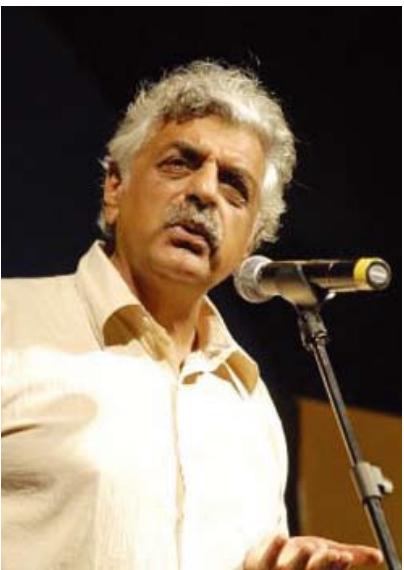
이슬람 혐오증을 비판할 때, 우리 사회주의자는 이슬람 혐오증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또 다른 임무도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는 비합리적이고,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위기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굴복한 것이 재앙이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낡은 공백에서 다양한 경향들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공장, 농장, 마을, 지역, 나라 등 모든 수준에서 대중이 진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주의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통해서만 옛 사회의 낡은 것들이 일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심화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근본주의의 충돌>(타리크 알리, 미토)을 권한다.

번역 차승일



타리크 알리는 작가이자 방송인, 좌파 활동가이다. 타리크 알리의 주요저서 중 <근본주의의 충돌> (미토), (1969) (삼인)과 이슬람 소설 3부작 <술탄 살라딘> (미래인)과 <석류나무 그늘 아래> (미래인) 등이 국내에 번역돼 있다.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7월 26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타임오프 투쟁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켜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7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7월 21일 총력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악과 타임오프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은 반갑다.

현 상황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부 분열과 정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를 더한층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노조법 개악과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수를 줄이고 통제를 강화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공격이다. 이렇게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어 둔 다음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나 정리해고 자유화 등을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지배자들의 시도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양치기 소년’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그동안 스스로 투쟁의 가능성을 낮춰 왔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내세웠지만 노사정위원회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가해서 교섭에 매달리며 투쟁 조직을 방기했다. 파업은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칼’이 아니고 차근차근 건설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다.

민주당에 의존해서 정부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뒤통수를 맞으며 운동의 김을 빼기도 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합에 매달리는 민주노동당 등의 태도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파업을 결정했다가 철회하고 연기하는 일도 반복됐다. 4월 말로 결정했던 파업을 6월로 연기했고, 6월 파업은 다시 철회됐다. 이런 ‘양치기 소년’ 효과는 노동자들의 투지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 틈을 이용해 정부는 5월 1일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처리했고, 결국 7월 1일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것이다.



단식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청년 민주노총’답게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을 개악하는 것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지난 한 달간 투쟁과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소속 작업장의 80퍼센트가 타임오프를 거슬러 현행 수준의 단협을 따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한 기업주는 “파업을 견디다 못해 ... 울며 겨자 먹기로 갈등의 불씨를 나중으로 미룬 셈”이라고 한탄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핵심인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어떤 수준으로 합의가 되는

냐에 따라 나머지 작업장도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합의 문구들이 대부분 이후 완성차 노사의 합의내용을 보고 재논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현대차노조 지도부가 이런 과제를 외면하고 투쟁 전선을 이탈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아차노조 지도부의 머뭇거리는 태도도 아쉽다.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단호하게 파업을 결정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투쟁으로 노조법 재개정과 하반기 투쟁을 위한 기선을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투쟁 시능에 그친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머뭇거리는 상층 지도자들을 압박하며 이런 투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선전·선동과 투쟁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박성환

기아차

지도부는 더는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헤럴드 경제>는 “19년 무파업 기록 무너진다는 기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 등 10년 이상 무파업 행진을 이어온 사업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년 연속 파업하는 기아차의 경우 타임오프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 사업장에선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꾸짖었다.

타임오프법제는 바로 기아차 노조처럼 민주노총의 핵심인 대공장 노조를 겨냥해 만든 제도란 소리다!

따라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타임오프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기아차 사측은 타임오프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의원과 조합원의 일상 활동까지 감시하며 탄압하고 있다. 이에 맞서 기아차지부는 본관 항의 집회와 양재동 본사 1박2일 노숙투쟁을 벌이며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힘을 직접 동원하는 전술은 아직까지 쓰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 활동가들은 퇴근 홍보전과 출근 투쟁을 하며 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공무원노조 수련회

더 적극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7월 2일 공무원노조 지부장-사무국장 수련회가 있었다. 이날 수련회 참가자는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수련회의 갑절 이상이었다.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계획안 설명과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많은 현장 간부들이 수년간 사실상 삭감돼 온 임금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적극적 투쟁계획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하반기 투쟁계획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투쟁 계획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수련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두번째 강연인 ‘공무원 노동자와 정치 자유’에서 연사로 나선 전교조 박석균 부위원장의 강연은 듣고 있기에 불편한 부분

이 있었다.

박석균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공무원도 정치자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옳다.

그런데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살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무원노조가 사전 강연자로 초청한 연사 두 명 모두 ‘공동지방정부’를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 지방정부를 맡은 민주당도 이미 과거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하반기에 민주당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선거 패배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공무원 노동자들 자신의 행동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 마포지부 수석 부지부장

한국진보연대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6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지령수수 등)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과 최영욱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한중목 공동대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사법부조차 이번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차마 봐주기 민망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중목 공동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금속 탐지기까지 이용해 냉장과 안 반찬통과 이불 속, 아이들 양말 속까지 살사가 뒤졌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은 초라하게도 명함 몇 장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전부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진보연대 간부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 합법적 절

차에 따라 베이징, 선양, 개성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집회 등을 개최했으며 ... ‘MB심판을 위한 진보연대 2010출정식’을 했다”며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도 북한 김정일을 만나고 ‘회합·통신’을 했다.

“[세 명을 처벌하려면] 지난 10년간 남북교류사업을 해온 모든 사람들, 금강산, 개성, 평양을 방문한 국민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주한미군이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진보진영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몰아가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연세대 환경미화 노동자들

“노조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백10원 인상’으로 결정된 후 7월 9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만났다. 2008년에 처음 결성해서 지금은 조합원이 3백여 명인 연세대 분회는 이번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참가했다.

대부분 예수를 넘긴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불만을 털어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 거지들도 1백 원, 2백 원 안 받아요. 근데 2백10원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 황당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같아요.

“[2백10원 인상에] 실망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투쟁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2백10원, 이나마도 안 오르는 거죠. 학생들, 자식들, 내 새끼들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이예요.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고, 우리가 힘을 합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죠.

“[올해 초 노조가 생긴] 이화여대네요, 그전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해서 버려야 했는데 지금은 모아서 갖다 놓으면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해요. 우리보다 더 좋아졌지.”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만 대변한다는 비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가 한 조합원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만 대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기업도 노동자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지들은 몇 조 원씩 해먹으면서.

“만약 민주노총이 없으면 한나라당 독재가 됐을 거예요.

“난 이번에 선거할 때 되든 안 되든 서민들 편을 들어 줄 민주노총 후보[곽노현 후보]를 찍었어. 정치에 대해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가 방향을 잡을 수 있더라. 누구를 뽑아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하지만, 자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는 것이 힘이야. 노조를 하면서 정신이 많이 깨었어.”

김중환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KBS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2주가 지나면서 파업 열기와 파업 지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벌써 파업 지지 성금이 1억 1천만 원 넘게 모였다. KBS의 새 노조인 KBS본부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와 노조 실제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KBS 사측은 파업 이후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원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파업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나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연일 불법 파업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사측의 탄압을 두고 조합원인 이강택 PD는 “구 노조가 급격히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측이 새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단협이 체결돼 KBS본부의 실체가 인정되면 구 노조 조합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탈해 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더 좌파적·전투적인 새 노조를 중심으로 KBS 노조가 재통합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싸우고 있다. 15일부터는 아나운서를 포함해 새 노조의 모든 조합원이 전면 파업에 참가한다. 파업 집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결속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불법파업이라는 사측의 공격도 “전혀 먹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웃음과 환호,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파업 집회 현장은 노동자들의 축제를 보는 듯하다.

지긋지긋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 수가 8백여 명에서 1천 명 가까이로 급속히 늘어났다. 파업 열기의 밑바탕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 속에서 쌓여 온 노



‘김비서(KBS)’를 ‘개념방송’으로 바꾸려는 KBS 노동자들 7월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KBS 개념탐재의 밤’에 시민 2천여 명이 모여 파업을 지지했다.

동자들의 불만이 깔려 있다. 6년차 PD인 김종연 조합원은 “정부 실책 비판하면 ‘좌빨’로 보는 정부가 지긋지긋하다”며 파업 참가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의 라디오 주례 연설에 반대했다가 지방으로 좌천당한 PD들도 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많은 조합원들은 정권의 외압 때문에 그동안 하고 싶은 방송을 하지 못한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시사교양국 홍기호 PD는 KBS에서 “4대강의 ‘강’자만 꺼내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4대강이 아닌 ‘강’을 주제로 한 〈환경스페셜〉

프로그램도 중단됐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KBS본부의 파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방송인 김미화 씨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파문과 경찰이 MBC 라디오 생방송에 난입해 대본을 요구한 사태만 봐도 정부의 언론 장악에 왜 맞서야 하는지 알 수 있다.

KBS 사측이 블랙리스트 파문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발 때문에 궁지에 몰린 상황을 이용해 KBS본부는 단호한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

곧 KBS본부가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KBS본부가 1심에 이어 승리한다면 이 결과를 지렛대 삼아 투쟁을 밀어붙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아도 투쟁을 멈춰선 안 된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시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KBS본부의 파업이 승리한다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이명박 정부는 한층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언론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들은 새로운 투지를 얻게 될 것이다.

박건희

진보 교육감이라면 김승환·민병희처럼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도가 주관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며 학생 선택권을 옹호했다.

교과부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시행하도록 한 법 조항은 없다며 “위법을 저지르는 곳은 오히려 교과부다” 하고 반박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진 수업 파행을 보더라도 일제고사가 교육에 진정 해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교조가 지난 한 달 동안 초등학교 3백32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일제고사에 대비해 ‘0교시 수업’이나 7~8교시 보충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절반이나 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말처럼 “초등학교에서도 밤늦도록 학생들을 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는가.

민병희 교육감은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된 교사 4명을 복직시킬 계획이다.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성명처럼, 일제고사 때문에 고통 받은 많은 교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복직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률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 별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것을 “위법 상태”라고 비판했다.

대신 수업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 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업 내용]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과부는 현재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파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7월 12일 전북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교육감 퇴출 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마치 교원평가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 양 주장한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의 말처럼 현행 교원평가는 “입시 경쟁 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잘못된 제도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려는 김승환 교육감의 시도는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

최근 김상곤과 박노현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정부와 우파의 압박에 밀려 진보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태도는 우파의 기를 살리고 우리측을 혼란스럽게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7월 9일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MB 교육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의 자신감을 북돋았다. 이런 일을 진보 교육감이 진정으로 해야 한다.

정성영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경쟁교육 반대와 광범한 교육 개혁 염원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008년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1백69명과 공무원 83명도 교과부의 징계와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배자들의 전교조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제고사를 반대해 해직된 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교과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전교조 규약 개정 시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단호히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총복’이 되기를 거부한 전교조·공무원 노동자들을 겨냥한 탄압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배자들은 특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마녀사냥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말하듯이, “교사·공무원도 정치적 자유를 가진 시민”이고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입도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파면·해임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경쟁교육·입시지옥 정책에 반대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부자·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진보진영은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거나 ‘경징계로 마무리하자’는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저들의 탄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파면·해임에 직면한 한 교사가 말하듯, “경징계도 징계”이고, “우리가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 자유’를 포기하고 실정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2월에 민주노동당 권영길·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관철하려 해야 한다.

무릇 단결과 투쟁의 힘은 그 정당성을 확신할 때 배가된다. 우리는 ‘실정법’과 실용주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박성환



MB교육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민병희(좌)·김승환(우) 교육감

전교조본부 제공